

● [법과 정치]

1. 정치의 의미

[2점] [정답] ②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얻는가' 하는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참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② 자료는 지하도 상인과 주변 지상 상인 간 갈등을 보여주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하려고 한다.

2.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2점] [정답] ①

A는 자유 민주주의, B는 사회 민주주의이다. ㄱ. 역사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는 시민 혁명기를 전후로, 사회 민주주의는 19세기 중반에 나타났다. ㄴ.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쪽은 사회 민주주의보다는 자유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ㄷ.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ㄹ.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참된 민주주의의 판별 기준

[2점] [정답] ⑤

참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권력 분립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⑤ 정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성이 없는 독재 국가에서도 공공질서 유지 기능이 수행된다.

4.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의 이해

[2점] [정답] ⑤

평등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대했을 때 사회적 약자는 경쟁에서 밀리기 쉽다. 즉,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갑은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5.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의 차이

[3점] [정답] ③

국민 자치 방식과 관련하여 갑은 대의 민주제, 을은 직접 민주제를 선호하고 있다. ㄱ. 직접 민주제보다 대의 민주제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ㄴ. 대의 민주제보다는 직접 민주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ㄷ. 대의 민주제를 선호하는 입장은 대표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신뢰한다. ㄹ. 인구나 영토의 크기에 따른 제약을 받는 직접 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대의 민주제이다.

6. 역대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변화

[3점] [정답] ④

① 중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와 연계된다. ②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③ 11대~16대 선거는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1인 1표제 방식이었다. ④ 15, 16대에 비해 17~19대 선거에서는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의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17~19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인 2표제가 실시됨으로써 평등 선거 원칙과 직접 선거 원칙이 강화되었다.

7.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된 배경

[2점] [정답] ②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 보아, 갑국에서는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ㄴ, ㄷ.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다.

8.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의 비교

[3점] [정답]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ㄱ, ㄷ.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서는 모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 입법부가 구성된다.

9. 정책 결정 과정 모형

[2점] [정답] ⑤

그림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선거는 투입 기능을 수행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비판과 검토의 과정으로 환류 기능도 수행한다. ① 의회의 입법 과정은 정책 결정 또는 산출 과정에 해당한다. ②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이 아니라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③ 환류가 활발할 때 정책 결정권자의 권력 행사는 제한·견제될 수 있다. ④ 권위주의적 정부일수록 투입 과정보다 산출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진다.

10. 민주 선거의 원칙

[2점] [정답] ②

(가), (나)는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제한 선거의 사례, (다), (라)는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차등 선거의 사례이다.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이고, 평등 선거는 한 사람에게 1표씩 선거권을 배부하여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거나,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의 비교

[2점] [정답] ⑤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①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이다. ② 의원 선거 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은 정당이다. ③ 이익 집단이 정당에 비해 특정한 쟁점에 치중하여 활동한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은 모두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2.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

[3점] [정답] ④

①은 정부, ②은 상임 위원회, ③은 대통령이다. ㄱ. 정부는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지고 있다. 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ㄷ.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 의사(議事) 진행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ㄹ.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폐기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13. 미국 독립 혁명

[3점] [정답] ③

미국 독립 선언(1776)은 사회 계약론자이자 계몽 사상가인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ㄱ. 미국 연방 헌법(1787)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3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였다. ㄴ. 18세기 당시에는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절대적 평등이 추구되었다.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상대적 평등이 추구된 것은 20세기부터이다. ㄷ. 저항권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행사될 수 있다. ㄹ.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천부적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프랑스 혁명의 성격

[2점] [정답] ③

A는 프랑스 혁명(1789)이다. 인간의 이성(理性)을 신봉하는 계몽 사상 등은 프랑스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계몽 사상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② 사회권이 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시기는 20세기이다. ④ 프랑스 혁명 직후에도 재

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선거권에 차이가 있어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⑤ '입헌 군주정'을 '입헌 공화정'으로 바꿔야 옳다.

15.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점] [정답] ④

①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② 법의 내용을 중시하는 을은 정의에 위배되는 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③,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요구한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에 통치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정치권력의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본다.

16. 청구권과 자유권의 차이

[2점] [정답] ④

A는 청구권, B는 자유권이다. 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적 성격을 띤다. ② 자유권은 평등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③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성격을 띤 반면,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을 띤다. ④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17. 재판의 심급 제도

[3점] [정답] ③

ㄱ.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의 경우,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가 적용된다. 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의 경우, 단심제가 적용된다. ㄷ.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2심 법원에 항고, 3심 법원(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ㄹ.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 법원에 항소, 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18. 선거 결과의 분석

[3점] [정답] ①

ㄱ. 선거구가 4개이고 의석수가 8석이므로, 선거구당 2명씩 선출되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당선자 간의 표 차이로 인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ㄴ. 선거구 C에서 사표는 10만 표, 선거구 B에서 사표는 11만 표이다. ㄷ. 선거구당 선출되는 대표의 수는 동일한데도, D 선거구에 비해 A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2배나 많으므로, A 선거구의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더 낮다. ㄹ. 을당 후보들과 병당 후보들의 의석은 2개로 동일한데, 을당 후보들보다 병당 후보들의 득표수 합계가 많으므로, 병당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3점] [정답] ⑤

①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헌법 소원 등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과잉 금지의 원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⑤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20. 19대 총선 결과의 분석

[3점] [정답] ④

① 19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4개 이상이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③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A당 소속 의원들만 국회에 출석한다면, 거부된 법률안을 A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④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B당의 재적 의원은 1/3을 초과하므로,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법률안의 발의가 가능하다.